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

- ‘북한 개입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 희 송**

국문초록

이 글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의 진위 여부를 1980년도의 남북관계와 북한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논증하고자 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무장투쟁으로 격화되고 있었던 1980년 5월 22일 판문각에서는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있었다. 당시의 회담상황을 기록한 ‘남북한 대화록’에는 1980년도의 남북관계 및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사태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로동신문은 5·18왜곡·평혜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광주의 사태’에 대한 실황중계는 고사하고 뒤늦게 소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1980년 5월 한달 동안의 로동신문 보도로만 한정하면 5·18민주화운동보다는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를 더 비중있게 보도했다. 북한 개입설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 언론보도와 탈북자들의 발화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 담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심어 : 5·18민주화운동, 5·18역사 왜곡, 남북한 대화록, 로동신문

I. 문제제기

최근 들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색깔공세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보수정권 출범이후 일부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 특수부대

* 이 논문은 2016년 5월 13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주관한 5·18민중항쟁 제3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5·18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광주 침투설, 남파 간첩들의 선동설 등 ‘북한 개입설’이 제기되었을 때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5·18왜곡·폄훼 세력의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의 결과 북한 개입설은 일정한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5·18왜곡담론이 정치담론으로까지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뉴스타운(www.newstown.co.kr) 사이트에서 전개하고 있는 ‘광주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 찾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뉴스타운은 5·18항쟁 당시의 사진에 등장하는 항쟁 참여 인물들을 북한 정권의 주요 인사들 사진과 비교하여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인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 부대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지어는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도 71번 광수로 지칭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도 ‘광수’찾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진 속의 실제 인물을 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5·18왜곡·폄훼세력이 북한 개입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북한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공개적인 검증과 접근이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논박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반공이데올로기가 초월적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왜곡담론에 맞선 담론투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개입설의 주요 근거가 되는 1980년 5월 당시의 북한 언론 보도와 탈북자들의 발화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북한 개입설의 진위여부를 논증하고자 한다. 탈북자들의 발화처럼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는지 1980년 5월 당시의 ‘남북관계’를 살펴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80년 5월 당시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5·18왜곡·폄훼 세력의 주장처럼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북한군 침투가

가능했는지? 만약 ‘북한의 침투나 도발 시도가 있었다면 정부당국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정부의 공식 문헌 자료를 통해 1980년 5월 당시의 남북관계와 군사적 대치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북한군 침투설의 경우 정부가 사실관계를 밝히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왜곡·편향세력의 주장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1980년 당시의 남북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정부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1980년 5월 항쟁기간 발행된 북한 로동신문의 보도양태를 분석하여 북한 개입설의 진위여부를 논증하고자 한다. 5·18왜곡·편향세력은 북한 개입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5·18항쟁에 대한 북한의 언론보도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5·18상황을 실황 중계한 방송은 북한 방송으로, 북한은 광주실황을 밤낮으로 방송하였으며, 이런 상황들을 실황 중계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요원들을 대거 광주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지만원, 2010: 182). 왜곡·편향세력의 주장처럼 1980년 5월 당시 북한의 언론보도가 실황중계의 수준으로 이뤄졌는지 로동신문 보도양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북한 로동신문 보도 양태에 대한 분석은 5·18 왜곡·편향세력이 주장하는 북한개입설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항쟁기간 동안 ‘사건’으로서 5·18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북한 당국과 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로동신문의 보도양태이기 때문에 당시의 보도에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의미부여와 왜곡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이후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역사로서의 5·18’이 아닌 1980년 5월 당시의 5·18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탈북자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5·18에 대한 기억의 왜곡여부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고찰이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론

이 연구는 1980년 5월 당시의 남북관계와 북한 언론보도 양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의 진위여부를 논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80년 5월 당시의 남북관계는 정부의 문헌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22일 남북총리급 회담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당시의 남북관계를 기록한 ‘South-North Dialogue in Korea(남북한 대화록)’을 중심으로 1980년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부 자료센터에서 새롭게 확인한 영문자료 “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 21~30, 1979.9~1982.12)”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의 남북한 대화를 일지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통일부가 발간한 ‘남북한 대화록’은 1980년 당시 정부당국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의 상황과 수준 그리고 북한의 군사도발사례를 담고 있어서 북한 개입설의 진위여부를 논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 대화록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당시 군의 경계태세 관련 자료 및 미국정부 고위관계자의 증언을 파악하여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5·18왜곡·편향세력은 북한의 언론보도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공작에서 최고의 성공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18 당시에 북한은 광주실황을 밤낮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방송하여 북한군인들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적개심과 의협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전군에 폭풍명령을 내려 남침준비를 시켰다”면서(지만원 2010), 북한 개입설의 주요한 근거로 북한의 언론 보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진위여부는 당시의 북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보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 개입설의 근거로 제시된 북한 언론보도 내용은 로동신문을 통해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신문뿐만 아니라 당시의 방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북한 방송에 대한 접근이 현재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이 가장 적절한 분석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당의 방침과 정책, 당원들의 투쟁 업무를 일상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이 목적으로 바로 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대변한다(이광재, 1984; 전미영, 2010). 로동신문은 1945년 10월 13일 북조선 공산당의 결정에 의해 11월 1일 ‘正路(정로)’라는 신문제호로 처음 발행되었으며, 1946년 8월 30일 조선노동당 제1차 대회에서 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다(권명은, 1980).

로동신문은 매일 발행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배포되고 당 간부에서부터 당 세포비서에 이르는 모든 당직자들과 책임자들이 의무적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당원을 제외한 일반 개인은 구독할 수 없지만 각 사업소나 공장, 학교, 군부대에 의무적으로 배포되고 사상공양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모든 북한 주민이 접한다고 할 수 있다(이광재, 1984).

로동신문은 1980년 당시 총6면으로 발행되었다¹. 로동신문의 지면 배치에서 제1면은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게재되었는데, 김일성의 연설문, 담화문, 시책 지시, 외국 대표단 접견, 현지 지도 등의 내용이 실렸다. 부정기적으로 게재되는 사설도 주로 1면에 배치되었다. 제2, 3, 4면은 당과 주석에 대한 우상화 선전 내용이나 해설 기사, 사회주의 건설성과 등이 게재되었다. 제5면에는 남한 관련기사가

1 로동신문은 특별한 경우 지면을 늘려 8~10면까지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이기우, 2014).

게재되는데 대부분 남한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마지막으로 제6면은 외신면으로 외국 통신사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미국과 남한을 비방하는 기사를 주로 실고 있다.

이러한 로동신문의 특성상 로동신문은 북한 정권의 정치적 태도를 알아보는데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자료로서(김원태, 2010)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서구의 신문 보도와는 달리 속보성과 시사성을 담보한 뉴스 보도지가 아닌 당의 선전 교양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갖는 사회·정치적 맥락과 정치적 의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에 로동신문 열람 신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로동신문이 갖는 북한 언론매체의 속성상 기존의 매체 비평이 아닌 내재적 접근방식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로동신문의 보도양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사가 어느 면에 실렸는지 구분했다. 로동신문은 각 지면에 배치되는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게재된 횟수만이 아니라 어느 지면에 실렸는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동신문의 지면 특성상 제1면은 김일성주석의 동정이나 지시사항이 주로 실린다는 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면이다. 따라서 만약 로동신문 1면에 5·18관련 기사가 실렸다면 그 만큼 북한에서 비중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면의 기사와 5면의 기사는 게재 횟수로는 동일하더라도 그 기사의 의미와 비중을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로동신문 제1면의 지면 배치와 기사 건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이 동일하게 게재된 날이지만 지면배치는 물론 기사 건수나 분량에 있어서도 지면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로동신문 1면의 지면 배치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당일 보도량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도 건수만으로

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로동신문 보도양태 분석에서는 산술적인 보도건수 뿐만 아니라 지면에서 기사가 점유하는 비율을 세분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그림 1〉 북한 로동신문의 지면 배치 사례

로동신문의 보도양태는 제1면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1면 전체 지면에서 관련기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지면을 점유했는지 세분했다. 로동신문 1면에서 기사의 점유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 1〉의 5월 16일과 5월 18일 점유비율 계산 예시처럼 ‘로동신문 제호’ 아래 지면에서의 기사 비율에 따라 점유비율을 산정했다. 고정적으로 지면을 점유하는 ‘로동신문 제호’의 윗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래 지면을 전체 면적으로 산정한 이후 개별 기사들이 점유한 비율을 퍼센트로 각각 구분하였다. 가령 5월 16일은 제호 아래 전체 지면을 점유하고 있음으로 100%, 5월 18일의 경우 지도자 동정 소

식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남한의 민주화 시위 보도는 전체 지면에서 70%를 점유하고 있다.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에서 지면의 점유비율을 살펴보는 것의 타당성은 3월 29일의 보도와 5월 18일의 보도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의 경우 기사의 게재 빈도수로는 1건의 기사로 산정되지만 지면의 비중으로 살펴보면 5월 18일 보도된 맨 아래 2건의 기사만큼의 지면을 점유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 또한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광주를 비롯하여 서울의 여러 대학의 시위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렇듯 서구의 신문보도와는 다른 지면배치의 특징을 갖는 로동신문의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도건수에 따른 산술적인 매체비평보다는 점유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로동신문 1면의 남한 민주화운동기사 점유비율 계산 예시

기사의 점유 비율	
1980년 5월 16일(100%)	1980년 5월 18일(70%)
<p>로동신문</p> <p>6천명 전남대학교 학생들 <유신잔당 물러가기>를 구호하며 투석전, <도청>앞까지 진출</p> <p>광주시에 중심거리교동이 차단되고 경찰관 등 10여명이 중경상, 50여명의 교수들이 <임실선언>를 채택하고 시위를 가다</p> <p>반파쇄 반민주관전 남조선선전역에!</p> <p>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숙명대학교 학생 8천여명이 문화방송국앞에서 성도모임</p> <p>현양대학교, 건국대학교 학생들 광명문으로 진출, 전복(대학교, 원광대학교)의 수천명 학생들도 현충사위</p> <p>시위에 나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궁지 앞의 광장을 주장</p> <p>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협자가 정지</p> <p>서울 시내 20여개 대학 학생들이 이간시위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p>	<p>로동신문</p> <p>남조선선전역에서 15일 12만여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p> <p><국무총리>와 <보안사령관>의 사임을 요구 15일간의 시위열사 학살 1명 희생</p> <p>광주시에 3개 대학과 7개 전문대학 학생 3만여명이 <계엄령 해제>등을 요구하며 해병대원 학교광장선문(대학) 직봉봉 성도대(광)와 <외형사> 진영</p> <p>광주 시내 9개 대학 학생 2만 5천여명이 시국성도대(광)와 기두시위를 단행</p> <p>수원시와 6개 대학 3천 500여명의 남년대학생들이 거리를 누비며 시위, 레리도 살포</p>

이번 로동신문 분석에서는 5·18왜곡·편혜세력이 주장하듯이 5·18 관련 보도가 실황중계 수준으로 실시간 보도가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보도 일자와 함께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날짜를 구분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로동신문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가 기존의 보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 기간 10일은 물론 항쟁 전후의 시기로 기간을 확대하여 보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사의 게재 빈도를 중심으로 5·18에 대한 보도양상을 고찰한 전미영(2010)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대남기사가 급증하고 5월 18일 하루에만 5·18관련 기사가 1·2면에 5건이나 실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이전까지로 분석대상을 확대하면 5월 18일자 로동신문의 대남기사는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5·18관련 기사로 분류한 내용도 사건 발생시점과 장소를 엄밀하게 분석하면 5·18민주화운동 이전의 시위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은 기사 유형별 분류나 일자별 게재 빈도와 같은 기존의 매체 비평의 방식으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사의 비중과 사건발생 시점을 구분하고, 내용의 의미변화 과정을 함께 파악하는 보도양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제1면에 실린 내용은 지면에서의 점유 비율과 함께 기사 제목을 같이 명기하였으며, 기사 제목은 로동신문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Ⅲ.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남북관계

1. 1980년의 남북관계

1980년 5월 17일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검열, 태업 및 파업행위 금지, 전국 대학의 휴교 조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포고령 10호를 발표했다. 포고령 발표와 동시에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조치가 이뤄졌으며 각 대학에는 계엄군이 배치되었다. 또한 5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처하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5·17조치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사회혼란을 이용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 적화책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간첩의 계속적인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요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고 3천7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속에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앞으로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처하여 나갈 것입니다**(1980년 5월 18일 대통령 최규하).

5·18민주화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5·17조치에 대해서 신군부와 최규하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은 신군부가 이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주장으로서 광주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 1980년 5월 당시에 ‘북한 위협’은 실재했던 것일까? 1980년 당시의 남북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남북한 대화록’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북한의 특별한 도발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 분단 이후 지속되었던 국지적인 충돌이나 간첩침투와 같은 일상적 위협은 존재했지만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정도의 위협과 충돌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5·17조치에도 불구하고 1980년 1월부터 추진되었던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회담은 중단되지 않고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 10월까지 총10차례의 회담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분단이후 진행된 남북대화의 역사에서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는 남한과 북한정부의 내부적 요인이나 상호간의 도발에 따라 무산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만약 신군부의 주장처럼 1980년 5월 당시에 북한의 위협이 실재했다면 5·17조치 이후의 남북회담은 중단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군부는 헌정질서를 중단할 만큼 북한의 대남 적화책동이 격증되는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의 회담은 중단하지 않았다. 특히 5·17조치 직후 개최 예정이었던 5월 22일자 제8차 실무대표 회담은 아무런 변동 없이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회담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9년 1월 19일 박정희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있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아닌 ‘전민족대회’ 개최를 주장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980년 1월 12일 북한이 남북총리회담을

제안하고 1월 18일 최규하대통령이 총리회담 추진을 천명하면서 1975년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회담이 5년 만에 재개되었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회담은 1980년 2월 6일 개최되었다. 1차 실무 대표회담에서는 1976년 단절되었던 남북 직통전화의 재개통을 합의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밀도 깊은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제10차 실무회담까지 지속되었다. 실무대표

〈표 2〉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일지²

차수	일시 및 소요 시간	장소	내용
1차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1시간 12분	판문점내 중립국 감독위	남북직통전화 재개 합의
2차	1980년 2월 19일 오전 10시, 2시간 30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회담 장소와 의제를 제외한 6개항 합의
3차	1980년 3월 4일 오전 10시, 3시간 20분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의제 사전 협의 동의, 장소 이견
4차	1980년 3월 18일 오전 10시, 3시간 20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회담 절차 합의, 의제 추후논의
5차	1980년 4월 1일 오전 10시, 1시간 48분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북한의 3월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의 향의로 회담 지연, 차기 회담 합의
6차	1980년 4월 18일 오전 10시, 3시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회담명칭 이견, 의제협의 지속
7차	1980년 5월 6일 오전 10시, 3시간 15분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의제 이견 절충
8차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2시간 24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5·17조치의 이유로 북한을 거론한 것에 대한 북한의 향의로 회담 지연, 차기 회담 합의
9차	1980년 6월 24일 오전 10시, 2시간 6분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남측: 총리회담 9월 개최 제안 북측: 건강상 이유로 수석대표 불참, '광주사태' 관련 남한 당국 비난
10차	1980년 8월 20일 오전 10시, 1시간 30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남측: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 제안 북측: 건강상 이유로 수석대표 불참, '광주사태' 관련 남한 당국 비난

2 통일부 자료 "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 21~30, 1979.9~1982.12)" 자료에서 재정리.

회담에는 남한정부에서는 김영주 수석대표와 정종식, 이동복 대표가 참여했으며, 북한정부에서는 현준극 수석대표와 임춘길, 백준혁 대표가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남북관계를 기능할 수 있는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회담은 아래 일지와 같이 1980년 내내 지속되었다.

2.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남북관계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판문각에서는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회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광주의 금남로와 도청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운집하여 전날 공수부대의 집단발포와 퇴각과정에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도심을 정리하고 있었던 반면에 군은 헬기를 이용하여 시내를 선화하면서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고 있었다. 5·18왜곡·폄훼세력이 북한 특수부대가 파견되어 광주를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는 5월 22일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모습이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회담은 2시간 24분 동안 진행되었다. 당시의 회의 상황을 정리한 ‘남북한 대화록’은 “양측 대표단은 총리회담 의제를 결정하는 것을 계속하기로 전제하였지만 북측 대표단이 남쪽의 5월 17일 계엄령 확대, 대학가 혼란같은 내부적 문제를 중상모략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남북관계는 회의 시작 전 전체 의견을 발언하는 이른바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남한 수석대표는 북측의 모두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북측은 이제까지 실무회담을 남북 양측 사이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선동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 참여해 왔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북측의 언급은 이러한 의심을 더 하게 만들었다. 만약 회담이 성공하려면 각각 상대편 체제의 내재된 질서를 존중하면서 남북양측이 실무급 권한에 충실하게 회담을 수행해야만 한다(김영주 남한대표 회의 시작 발언, 제8차 회담).

반면에 북한 수석대표는 총리회담의 이슈만 합의되면 회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간 회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표는 회의 시작 발언을 통해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이유의 하나로 거론한 북한 위협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총리회담이 제안된 이 때에 오직 의제의 이슈가 결정되기만 하면 회담은 열릴 수 있다. 실무회담의 앞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쌓음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간 회담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한 당국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모색하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음모가 격화되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엄령을 확대했다. 이것은 우리(북한)에 대한 도발행동이며, 회담 속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현준극 북한대표 회의 시작 발언, 제8차 회담).

북한대표단의 주장에 대해 이동북 남한대표는 북한 측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라디오 방송에서 남한의 최근 학생운동에 대해 2,136회나 언급하면서 많은 북한 방송들이 남한 학생들에게 ‘봉기하라, 최후까지 정의의 투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던 사실을 들어 북한이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의 대표단은 회의 시작 발언을 통해 당시 시국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는데 남한 대표단은 남한 내부 상황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불가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후 총리회담의 실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자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

이후 남한 대표단은 자신들이 준비한 의제 초안의 적절성을 설명하면서 각 의제에 대한 논평을 시작했다.

남북한 대화록에 따르면 남한 대표단은 5월 22일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 총리회담의 개최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타진하였으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항의나 이의 제기는 없었다. 제8차 실무회담의 과정에서 남한 대표단이 북한군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5월 22일 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남한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할만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실무회담에서 군사적 도발과 위협 문제는 회담의 주요 안건으로 늘 다뤄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도발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월 1일 개최된 제5차 회담은 3월에 있었던 북한군의 무장침투 문제에 대한 남한의 문제제기로 회담이 순연되었다.

5월 22일 이후 개최된 제9차, 10차 회담에서도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남한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제9차 회담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속한 회의진행을 촉구하는 남한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진행된 제9차, 10차 회담에서 남북회담의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개최된 제9차 회담의 경우 북한 현준극 수석대표가 와병을 이유로 회담에 불참하고, 광주의 유혈참극에 대해 남한 정부를 계속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무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의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던 ‘회담시기와 의제’ 문제를 북한에 대폭 양보하였다.

나는 남북당국 사이의 생산적 대화로서 총리회담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나는 북한 측에 남북대화 성사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해주기를 기대한다. 남측은 의제문제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남한대표의 회의 시작 발언, 제9차 회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처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있었다면 당시에 개최되었던 남북회담에서 남한정부가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북한 특수부대 침투와 같은 군사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한 대화록’의 최종 결론파트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제10차 실무회담을 끝으로 남북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남북한 대화록 총평을 통해 당시 회담의 성격을 기록으로 남겼다. 최종 결과 보고서 성격을 갖는 제3장 ‘실무회담의 중지’ 부문은 제1절 북한에 의한 회담의 중지와 남한의 재개를 위한 노력, 제2절 북한의 실무회담 지연과 난관 조성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은 회담기간 중 북한의 회담 지연을 위한 파괴적인 행위 및 발언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군사도발 사례’를 명기하고 있다. 군사도발 사례에 따르면 회담기간인 1980년도에 총4건의 군사도발이 있었다. 아래 표와 같이 3월과 9월에 군사도발이 집중되어 있는데,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군사도발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표 3〉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기간 중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³

월 일	내 용
1980년 3월 23일	한강 하류를 통한 3명의 무장공비 침투
1980년 3월 25일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를 통한 무장 간첩선 침투
1980년 3월 27일	남측군사분계선 강원도 금화 동쪽 5킬로미터 지점을 통한 3명의 무장간첩 침투
1980년 9월 9일	동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 남진호와 그 선원들을 북한 경비정이 피랍

3 통일부 자료 “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 24, 1980)” 자료에서 재정리.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남북한 대화록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5·18에 대한 언급을 남한 내부분제에 대한 부당한 문제제기로 간주하고 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트집 잡기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선전 선동의 무대로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 제10차 회담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남한의 '내부 문제'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남한의 '내부 문제'는 5·18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데, 정부는 '광주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시위를 '한국의 내부 문제들(some inter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로 명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침투와 같은 외부적(external) 요소와는 전혀 무관한 내부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남북관계에 관한 미국 정부 당국자의 인식

정부가 1980년 작성한 남북한 대화록은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할 개연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 당국자의 회고록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미국정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비극적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5월 22일 발표했다.

우리는 한국의 남쪽 도시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불안이 계속되고 폭력이 점증하면 외부세력에 의한 위험한 오판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평온이 회복되면 최대통령이 밝힌 정치발전 계획의 이행 재개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모든 당사자들에 촉구할 것이다. **우리가 재차 강조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악용하려는 어떠한 외부**

세력의 기도도 방위조약의 의무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⁴.

‘광주사태’관련 미국의 공식입장 발표에 대해서 신군부의 보도지침을 준수하고 있던 한국의 언론은 미국이 신군부에 대한 신뢰와 북한 위협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하면서 북한 위협론을 재차 강조했다. 언론이 강조했던 북한 위협론은 신군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공표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군 수뇌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발표였으며,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이 당장 도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히고 있다(글라이스틴, 2014:194). 5월 22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공식성명에 대해 글라이스틴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이 공식성명(대체적인 초안은 내가 만들었으며 ‘미국의 소리’방송과 주한미군 방송으로도 방송됐다) 여러 고려 사항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의 군 수뇌부는 광주의 혼란을 북한이 이용할 것을 우려해 1979~80년 위기의 때 고비마다 평양에 대해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컴과 나는 북한에 대해 그들만큼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중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워컴장군은 데프콘 3 경계경보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비공식적으로 발령하고 공중경보기의 증파와 항모 기동타격대의 파견을 요청했다(글라이스틴, 2014: 195).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의 군

4 필자 강조. 여기서 외부세력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도발과 같은 외부위협은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신군부의 요청으로 미국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른바 ‘북한 위협론’은 신군부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군은 데프콘 3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공식성명 이후 5월 23일 조기경보기 2대를 일본 미군기지에 배치하여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대처와는 별개로 한국군도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기 이전인 1980년 5월 11일부터 ‘대침투작전태세 강화조치⁵⁾’를 취하고 있었으며, 5월 14일 추가로 ‘대침투작전 강화지시’를 전군에 하달한 상태였다(군사연구실 작전상황실 상황일지, 1980). 또한 군은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5월 21일에 진도개 돌을 발령하여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는 여건에서 600여명에 이르는 북한군의 광주 침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5 1. 5월 11일 대침투작전태세 강화

: 최근 국내 소요사태 발생에 편승하여 북괴의 대남도발 침투가 예상되는 바 각급 부대는 대침투 내용 강화할 것

가. DMZ 은밀침투에 대비한 작전 및 경계 강화

나. 소요사태 발생 지역에서 보안 목표 경계강화

다. 수도권 및 영향권에서 해안 및 수중침투 봉쇄, AN2기 대비대책 강화

라. 필요한 점검 및 근무확인 조치

2. 5월 14일 대침투작전 강화지시(추가)

: 남북대화 및 대남 심리전 공세와 병행 적극적인 대남활동 및 비정규전 위협이 예상되고 있음

: 기간 80.5.10.~ 5.20

: 추가 조치사항

1) 조기 경보체계 확립(감시활동 강화)

2) 검문검색 철저(공항 및 항만)

3) 요인 신변보호 철저

4) 즉각 출동태세 유지

IV.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북한의 언론 보도

1. 5·18민주화운동 이전(5월1일~5월17일)의 언론 보도

1980년 5월의 로동신문 보도에서 남한의 민주화 시위관련 기사가 제1면에 처음 등장한 것은 5월 4일이다. 5월 4일자 로동신문은 1면의 지면 60%를 할애하여 5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민주화 대행진' 시위를 비롯한 각 대학의 학생시위 내용을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민주화 대행진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5월 15일 서울역 회군 시위까지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이른바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5월 4일(60%)을 시작으로 남한의 민주화 시위 관련 기사가 5월(42%), 11일(38%), 15일(74%), 16일(100%), 17일(80%)등 총 6회에 걸쳐 1면을 장식했다.

5·18민주화운동 이전의 로동신문 보도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5월 15일, 16일, 17일의 보도이다. 이 시기는 로동신문 1면의 기사 점유 비율에서 확인되듯이 5·18민주화운동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5월 한 달 동안 남한의 민주화 시위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날들이었다. 5월 15일과 16일자 로동신문은 형식면에서도 기존의 지면 배치와는 다르게 전체 시위 상황을 요약하는 큰 제목을 사용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5월 16일의 경우 '반파쇼 민주항전 남조선 전역에'라는 세로 제목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주었다. 특히 5월 16일은 제1면 전체를 남한 시위 내용으로 채웠을 뿐만 아니라 지면을 6면에서 8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했다. 로동신문이 1980년 5월 한달 동안 증면 발행한 것은 5월 16일이 유일하다. 5월 16일의 보도 내용은 서울시내 21개 대학 및 지방 11개 대학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5월 14일의 시위를 중심으로 13일과 14일의 시위 상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전의 언론보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로동신문 5면

에 주로 배치되었던 남한의 민주화 관련 기사가 1면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1980년도 로동신문에서 남한의 민주화 관련 기사가 1면에 게재된 경우는 2월 1건, 3월 3건, 4월 3건 등 총 7건이었다. 그러나 5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보도에서는 총 6번이 게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 발생 이전에 이미 1980년도 전체 보도 건수에 버금가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특히 5월 16일은 1980년 들어 처음으로 증면 발행까지 하였다. 이처럼 언론 보도의 증가는 남한의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시위 횟수도 증가했던 남한의 시국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언론 보도에서 5·18관련 보도가 늘어나는 것은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처럼 북한이 적화공작을 획책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이 1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전의 언론 보도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북한의 언론이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남한의 민주화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해왔다는 사실이다.

북한 로동신문은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을 비롯한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5·18민주화운동만을 특별하게 대서특필한 것이 아니라 1980년 초부터 남한의 민주화 시위를 비중있게 다뤘었으며 5·18민주화운동 기간에도 이러한 보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5·18민주화운동 이전(5.1~5.17)의 로동신문 보도 내용⁶

월일	지면(비율)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5.1	5면	· 4월 29일 시위상황	
5.2	5면	· 4월 30일 시위상황	
5.3	5면	· 4월 30일, 5월 1일 시위상황	

월일	지면(비율)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5.4	1면(60%)	· <유신잔당 몰아내자>, <비상계엄령 해제하라>,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라>/ 서울대학교 15개 단과대학 학생들이 1만 2천여명이 민주화대총회를 열고 시위투쟁을 전개, 시국선언문을 발표	2일, 3일 시위상황
		· <계엄령을 해제하라>, <강제징집 철회하라>, <학우의 피를 보상하라>/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 롱성과 가두시위를 전개, 경찰과 투석전	2일 시위상황
	5면	· 5월 1일, 2일 시위상황	
5.5	1면(42%)	·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모든 지식인들은 민주화를 향한 대열에 참여하라, 재판재벌의 재산을 공개하라 해제하라/ 서울대학교 학생들 6천여명이 제2차 민주화대총회 진행	3일 시위상황
		· <유신잔당 물러가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울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낮에 이어 밤에도 롱성과 시위를 계속 전개	3일 시위상황
	5면	· 2일, 3일 시위상황	
5.6	5면	· 2일, 3일, 4일 시위상황	
5.7	5면	· 3일, 4일, 5일 시위상황	
5.8	4·5면	· 6일, 7일 시위상황	
5.9	4·5면	· 7일, 8일 시위상황	
5.10	5면	· 8일, 9일 시위상황	
5.11	1면(38%)	· 민족통일을 성취하자/ 서울대학교, 리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 단국대학교 학생 6천여명 투쟁 계속	9일 시위상황
		· 사회와 학원을 민주화하는 역사적 사명 수행해 국민모두가 참여하자, <비상계엄령을 조속히 해제하라>/ 서울의 여러 대학 학생들 10일에도 투쟁 계속, 교수들도 투쟁에 참가	
	5면	· 9일, 10일 시위상황	
5.12	5면	· 10일 시위상황	
5.13	5면	· 9일, 10일, 11일 시위상황	
5.14	5·6면	· 12일, 13일 시위상황	
5.15	1면(74%)	· 투쟁의 불길 온 남녘땅을 휩쓴다/ <학생운동의 대규모의 가두시위와 가두집회로 발전>/ <학생들의 움직임은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형세>/ <전두환을 체포하라>	14일 시위상황
		· 서울에서 20여개 대학의 3만여명 학생들이 중심거리로 달려나가 가두시위를 전개	14일 시위상황
		· 서울대학교 학생들 1만여명이 거리에 진출하여 격렬한 시위 전개, 기동경찰대를 포위하고 투석전	14일 시위상황

월일	지면(비율)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 〈모든 대학들이 가두시위〉, 〈서울시내사태 긴박〉/ 일본의 신문들이 14일 전개된 남조선학생들의 투쟁을 보도	
	5·6면	· 13일, 14일 시위상황	
5.16	1면(100%)	· 반파쇼민주항전 남조선전역에!	
		· 대구시내 대학생 1만2천여명이 경찰과 투석전, 5대의 경찰차량을 불태우고 파출소 3개를 파괴	14일 시위상황
		· 6천명 전남대학교 학생들 〈유신잔당 물러가라〉 등 구호말에 투석전, 〈도청〉앞까지 진출/ 광주시의 중심거리교통이 차단되고 경찰관 등 10여명이 중경상, 50여명의 교수들이〈량심선언〉을 채택하고 시위에 가담	14일 시위상황
		·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송전대학교 학생 8천여명이 문화방송국앞에서 성토모임/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학생들 광화문으로 진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의 수천명의 학생들도 연좌시위	14일 시위상황
		· 시위에 나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당국자와의 담판을 주장/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열차가 정지	14일 시위상황
			· 서울시내 20여개 대학 학생들이 야간시위/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
	5·6·7·8면	· 13일, 14일, 15일 시위상황	
5.17	1면(80%)	· 서울에서 15일에 10만명 군중이 반(정부)시위/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	
		· 15일 하루동안 남조선에서 62개 대학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	
		· 8만명 시위학생들이 광화문을 향해 행진, 경찰과 대치/ 모여든 주민들로 남대문인근은 인산인해	15일 시위상황
			· 서울 남대문근처에서 경찰과 맞선 학생들이 경찰차량을 소각/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바리케트를 쌓고 경찰과 투석전
		· 고려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16일에도 가두시위/ 광주의 대학생 1만5천여명이 시내광장에서 연좌농성/ 여러 지방의 대학생들이 시위계속	16일 시위상황
	4·5·6면	15일, 16일 시위 상황	

6 제목과 기사내용은 로동신문에 실린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2. 5·18민주화운동기간의 언론 보도

1) 5월 18일~21일의 언론 보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로동신문의 보도는 1980년 5월 19일 처음 등장했다.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5월 18일의 경우 로동신문 1면에는 남한의 민주화 시위 기사가 5월 15일부터 연 나흘째 게재되었지만 기사 내용은 15일과 16일의 시위 상황이었다. 1면의 70%에 걸쳐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5월 19일의 보도에서 광주지역의 민주화 시위 내용이 1면의 중심 기사들로 게재되었지만 항쟁으로 변모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는 아니었다. ‘광주에서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계엄령>을 무시하고 반<정부>시위, 경찰서 습격’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계엄령의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시위가 지속되는 광주지역의 시위상황에 대한 보도였다. 5월 19일의 보도는 5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를 보도했던 것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5월 20일부터이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월 20일 1면 기사의 제목으로 ‘무장한 군대들과 격렬 충돌’, ‘광주의 중심거리는 전투장과 같다’ 와 같이 기존의 시위 양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에서는 시위가 ‘폭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처음 등장한다. 5월 19일 보도에서 광주의 시위를 기존의 시위 보도와 마찬가지로 반<정부 시위>라고 보도했던 것에 비해 20일의 보도는 시위의 성격을 다른 수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광주에서의 항쟁이 격화되고 있던 상황과는 달리 5월 21일 로동신문 보도는 5월 20일에 비해 기사 건수와 점유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 5월 20일 보도의 경우 광주의 시위관련 내용이 1면에 3건, 5면에

4건 등 총 7건의 기사가 실렸는데 5월 21일에는 5면의 2건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전날 보도에서 폭동으로 언급된 광주의 시위는 다시 학생 시위로 보도되었다. 특히 1면에는 남한의 민주화 시위 소식이 아닌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19개 정당 및 사회단체가 5월 20일 발표한 '연합성명'의 전문이 게재되었다. 연합성명은 남한 정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또 하나의 쿠데타이자 5·16군사정변의 재판으로 간주하고 계엄령 확대의 이유로 북한을 거론한 것을 규탄했다.

이 폭압 조치는 남조선파썸분자들의 상투적인 수법 그대로 이번에도 역시 〈남침〉이라는 허황한 구실밑에 우리를 걸고 강행되었다...새로운 〈비상계엄령〉의 선포를 전후하여 서울에는 중무장한 〈국군〉과 장갑차들이 쏟아져 시내 각 대학과 요소마다에 배치되었으며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포이 휩쓸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17일에는 이미 수십명의 학생지도자들이 체포되고 18일에는 전(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이 그의 비서들과 함께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정계인사들, 교육계, 종교계 등 각계의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체포되었다 한다(연합성명, 1980년 5월 20일).

5월 20일 발표된 연합성명에는 5월 17일과 18일의 민주인사 체포 소식 등은 언급하고 있지만 광주지역의 항쟁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비판한 연합성명의 영향 때문인지 5월 21일자 로동신문에는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기사들이 다시 등장했다.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과 사회단체의 연합성명이 발표되자 광주지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부터 연속 1면에 보도하던 남한 민주화 시위 기사 대신 연합성명의 전문을 게재했다. 5월 21일 보도는 로동신문이 속보성과 시사성을 담보한 뉴스 보도지가 아닌 당의 선전 교양지라는 속성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정권의 초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초기인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항쟁으로 격화된 5·18민주화운동보다는 이른바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하고 시민들이 치열한 공방 끝에 공수부대를 도심 외곽으로 몰아내고 본격적인 무장을 갖춰 갔던 광주의 긴박한 상황에 비해 로동신문에서는 기존의 남한 시위의 보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광주지역의 시위를 보도하고 있다. 5월 18일 이후 광주지역의 민주화 시위 보도가 많아진 것은 1980년 초부터 남한의 민주화 시위를 비중 있게 보도한 로동신문의 보도 방향 때문이었다. 5·17 긴급조치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시위가 전개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 지역의 시위만 지속되었기 때문에 전체 보도 건수에서 광주 관련 보도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로동신문에서는 항쟁으로 격화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표 5〉 5월 18일~21일의 로동신문 보도 내용

월일	지면(비율)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5.18	1면(70%)	· 남조선전역에서 15일 15만여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	15일 시위상황
		· 광주시내 3개 대학과 7개 전문대학 학생 3만여명이 <계엄령 해제>등을 요구하며 해불행진	16일 시위상황
		· 광주시내 9개 대학 학생 2만5천여명이 시국성토대회와 가두시위를 단행	16일 시위상황
		· 수원지역 6개 대학 3천500여명의 남녀대학생들이 거리를 누비며 시위, 빠라도 살포	16일 시위상황
	56면	· 15일 전국 시위상황, 한국시위에 대한 외국 언론의 반응 등	
5.19	1면(48%)	· 광주에서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계엄령>을 무시하고 반(정부)시위, 경찰서 습격	18일 시위상황
		· 광주에서 학생들과 시민들 5천여명이 시위 괴뢰공정부대가 출동하여 많은 학생들을 연행	18일 시위상황
		· 수만명의 광주시내 학생, 교수, 시민들이 합동민주화성토대회, 민주화해불행진, <화형식> 진행	16일 시위상황

월일	지면(비율)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25면	· 17일 남한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인사 연행상황 등	
5.20	1면(50%)	· 광주에서 5만명이 거리에 떨쳐나와 <비상계엄령>을 반대하여 시위 무장한 군대들과 격렬하게 충돌	19일 시위상황
		· 1만5천명의 시위자들이 괴뢰군과 충돌, <비상계엄령의 즉시 해제>등을 요구	19일 시위상황
		· 광주학생들 가두시위, 괴뢰군공정부대 군인들과 충돌 광주의 중심거리는 전투장과 같다고 외신이 보도	19일 시위상황
56면	· 19일 광주 시위상황, 비상계엄 확대에 대한 외국 언론의 반응 등	18일 서울상황	
5.21	1면(66%)	· 남조선에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에서 연합성명을 발표(성명 전문 게재)	
	56면	· 19일 광주 시위 상황, 서울의 주요 신문방송 기자들의 19일 집회 등	

2) 5월 22일~27일의 언론보도

5월 22일 로동신문은 무장투쟁으로 확산된 5·18을 본격적으로 보도하면서 광주시민의 시위를 ‘반<정부>시위와 폭동’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의 5월 21일 투쟁의 소식을 전하면서 2면에 큰 제목으로 ‘광주의 폭동군중이 라주경찰서의 탄약고를 습격’, ‘무기고를 부시고 무기 탈취, 괴뢰기관 점거’, ‘광주시의 반<정부>폭동 20만명 규모로 확대’라는 기사를 연속 배치했다. 맨 아래 기사에는 ‘광주의 시위대들이 목포, 라주 등 다른 도시들로 향하고 있다. 광주에서의 사태가 이 도시들로 확대될 것 같다’는 전망 기사를 실었다. 또한 외신면인 6면의 지면 구성을 새롭게 2개로 구획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외신의 반향을 따로 소개했다. 기존의 6면 기사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와 관련된 외신 보도를 실고 있었다.

5월 23일과 24일 로동신문 1면에 ‘광주폭동’ 소식이 실리기 시작했다. 23일자 로동신문은 폭동군중이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도

하면서, ‘광주의 항쟁’이 도내 16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도했다. 5면은 21일 폭동군중이 경찰지서를 점거하고 무장을 통해 군대식 부대 편제를 조직했다는 광주지역의 급박한 소식을 담고 있다. 5월 24일 로동신문 1면에는 21일 광주에서 30만명이 폭동에 참가했다는 기사와 함께 ‘최근 남조선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전문이 게재되었다.

최근 남조선사태에 대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유신체제의 청산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민주항쟁이 두달나마 계속되고 있다. 이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군사파쇼분자들이 남조선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는 급격히 대중적인 폭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그러나 광주의 사태는 그 어떤 무력탄압으로써도 정의의 항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성명, 1980년 5월 23일).

5월 23일 발표되고 24일 로동신문에 게재된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로동신문 1면에 실린 두번째 성명으로서 처음으로 ‘광주의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5월 20일 발표된 연합성명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던 반면에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중적인 폭동으로 변모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은 연합성명의 논지와 유사하게 신군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북한 위협을 거론하고 있는 사실을 비판하면서도 “남조선 내부가 어떻든 그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남한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은 5·18민주화운동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지만 광주의 사태가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광주의 사태에 대해 인민항쟁으

로 성격을 규정한 것은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발표 이후 6일이 지나고 나서인 5월 29일 로동신문 사설에서 구체화되었다.

5월 24일 로동신문에는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이 게재되었다. ‘괴뢰군으로부터 빼앗아낸 군용차에 〈전두환 찢어죽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진하는 광주의 반〈정부〉폭동군중들’, ‘괴뢰군의 장갑차를 빼앗아 타고 과감히 돌진하는 광주의 반〈정부〉폭동군중들’로 설명된 2장의 사진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처음 로동신문에 실린 5·18 관련 사진이다. 5월 19일과 21일, 22일, 23일 보도에서 시위 관련 사진이 게재되고, 일부 사진을 광주에서의 시위 사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5·18 관련 사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월 24일 처음 5·18민주화운동 사진이 실린 이후 25일, 26일, 27일에도 사진 보도가 이어졌는데, 보도된 사진의 대부분은 무장한 시위대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로동신문에 보도된 사진 자료는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⁷가 고립된 광주의 참상을 외부로 알리면서 공개한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8왜곡·폄훼세력은 “5·18광주사건 당시 텔레비전과 방송, 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광주에서 벌어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실상 그대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남한의 북한의 남침 통일을 정당화시키고 인민들의 사고의 식을 고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214).

7 힌츠페터는 5월 20일과 21일 광주에서 취재한 영상을 5월 22일 일본으로 반출하여 독일시간으로 5월 22일 저녁 8시 방송에 광주의 참상이 공개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 방향을 결정하는 로동신문의 사진 보도를 살펴보면 5·18 관련 사진 기사는 5월 24일 처음 보도되었으며, 5·18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희생자들의 사진 기사는 5·18민주화운동이 종료된 이후인 6월 5일 로동신문 특집 기사로 게재되었다. 6월 5일 로동신문 5면에는 ‘천추에 용납못한 귀족같은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계엄군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모습과 폭력을 행사하는 공수부대의 사진이 5면 전체에 실려 있다.

이렇듯 5·18왜곡·폄훼 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발행된 로동신문에서는 5·18희생자의 참혹한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이 종료된 이후 발행된 특집 기사에 희생자 사진이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항쟁 기간 투쟁을 독려하기 위한 선전의 수단으로 참혹한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이 되는 5월 27일 로동신문은 ‘광주에서 2만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반(정부) 집회, 전두환의 파면을 요구’, ‘무장시민들이 <계엄군>의 광주시내 돌입을 저지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미 광주에서는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함락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종료되었으며 이러한 소식은 5월 29일 로동신문에 보도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로동신문 1면에 실린 남한의 민주화 시위 기사와 비중을 살펴보면 5월 18일 70%, 19일 48%, 20일 50%, 21일 66%, 23일 46%, 24일 66%, 26일 32%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발발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면 5월 15일 74%, 16일 100%, 17일 80%의 비중이었던 것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가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22일, 25일, 27일에는 1면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처럼 5·18민주화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5

월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이 시기에 5·18 관련 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 비중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봄 시위’ 관련 기사의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5·18희생자의 참혹한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다. 로동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항쟁 기간 내내 광주의 소식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6〉 5월 22일~29일의 로동신문 보도 내용

월일	지면(비율)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5.22	2·4·5·6면	· 20일, 21일 광주 및 전남지역 시위상황	
5.23	1면(46%)	· 폭동군중이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 광주시는 무장한 시위자들의 통제하에 있다	21일 시위상황
		· 광주의 폭동군중이 함평, 고창등지로 진출, 완도, 목포 등지에서 경찰서들을 파괴/ 광주의 항쟁이 도내 16개 시, 군으로 확대	22일 시위상황
	4·5·6면	· 시위대가 목포, 영광, 담양을 장악/ 반(정부)세력이 무장을 강화	일시 불명
5.24	1면(66%)	· 21일 광주에서 30만명이 폭동에 참가/ 목포시내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합세	22일 시위상황
		· 목포에서 폭동참가자들이 재판소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들을 습격/ 신민당 총재가 <계엄령>의 철폐를 요구	
	4·5·6면	· 조선 중앙통신사 성명/ 최근 남조선사태에 대하여 (성명문 게재)	
	4·5·6면	· 22일, 23일 광주 및 전남지역 시위상황	광주사진 게재
5.25	2·4·5·6면	· 23일, 24일 광주 시위상황	
5.26	1면(32%)	· <비상계엄령>을 즉시 해체하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파썸적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남조선군사파쇼도당의 5.17폭압조치를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있었다	
	2·4·5·6면	· 24일, 25일 광주 및 목포지역 시위상황	
5.27	3·5·6면	· 25일, 26일 광주 시위상황	

월일	지면(비율)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5.28	3·5·6면	· 26일 광주 시위상황	
5.29	1면(68%)	· [사설 게재]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사변	
	5·6면	· 27일 광주 진압상황 및 목포 시위상황	

3.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

북한 로동신문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각각 다르게 호명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동신문은 시위의 성격과 저항 주체에 대한 설명을 매일 다르게 보도했다. 시위의 성격과 저항 주체에 대한 기술은 해당 시위의 성격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지면에서조차 제각각 다르게 보도했다는 것은 로동신문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5·18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5·18민주화운동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도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은 5월 21일 군의 집단 발표와 이에 맞선 시민들의 무장이 본격화 되고, 계엄사령관이 광주의 시위를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로 공식화하면서 명징해지기 시작했다. 국가폭력의 집행자였던 군부는 저항주체인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한⁸ 반면에 저항주체였던 광주시민들은 스스로를 ‘애국 시민’으로 규정하고⁹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1980년 5월 당시 현장의 당사자들도 5·18민주화운동을 혼란스럽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일관적이지 않는 북한 언론의 보도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보가 제한된 상황

8 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담론은 김희송(2013) 참조.

9 5·18항쟁 시기 시민들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는 김희송·최정기(2014) 참조.

에서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의 상황을 실황 중계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요원들을 대거 광주에 투입했다는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은 당시의 북한 언론 보도 내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담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5·18민주화운동 기간 로동신문의 5·18에 대한 호명

월 일	시위에 대한 규정	저항주체의 명칭
5월 18일	시위	시위자
5월 19일	반정부 시위	시위자
5월 20일	반정부 시위, 폭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	시위자, 시위군중
5월 21일	반정부 집회, 대중적 투쟁의 폭풍	시위자
5월 22일	반정부 폭동, 반정부시위, 폭동화	폭동군중, 시위대, 시위자
5월 23일	광주의 항쟁, 내란상태, 인민들의 투쟁	폭동군중, 무장한 시위자, 시위대, 반정부세력
5월 24일	폭동, 광주 폭동사건, 대규모 폭동사태	폭동참가자, 애국적 항쟁군중, 반정부폭동군중
5월 25일	폭동, 반정부항쟁,	군중, 무장한 봉기자군중청년·시민, 시위대
5월 26일	반정부 시위, 대중적인 애국적 반파쇼투쟁, 인민들의 투쟁	군중, 봉기자, 반정부폭동군중
5월 27일	반정부 집회, 반정부 시위	반정부세력, 무장 시민군중, 폭동군중, 시민군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매 시기마다 다르게 기술되던 5·18은 5월 29일 로동신문 사설이 발표되면서 비로소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규정된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 사변”이라는 긴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5·18을 ‘광주인민봉기’로 규정했다. 광주인민봉기는 5월 29일 로동신문 사설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와 비슷한 호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 규정이다.

**[사설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 사변**

온 남녘땅을 뒤흔들어놓은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는 지금 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반파쇼 민주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항쟁에 떨쳐나서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한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다. 봉기는 전체 질서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 인민들의 근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크고 격렬한 자랑스러운 대중적 폭동이다(1980년 5월 29일, 로동신문 사설).

5월 29일 로동신문 사설은 5·18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최초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동신문의 사설은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로서 당의 결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서나 지령서로 간주되며, 남한 관련 사설이 게재되는 것은 1년에 10여 편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성준, 1980; 전미영, 2010). 이런 점에서 로동신문의 사설은 일반 보도기사와는 전혀 다른 비중으로 읽혀지고 있다. 따라서 사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것은 5·18에 대한 조선노동당과 북한정부의 입장이 공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 29일 사설 발표 이후 예전의 지면 배치에서는 남한 관련 기사가 거의 게재되지 않았던 로동신문 4면에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각계 반응’이라는 특집란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각계 반응은 매일 상징적인 구호를 제시하고 5·18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신는 형태로 지면을 구성했다. 가령 5월 31일 각계반응 지면의 구호

는 ‘세계를 격동시킨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계를 격동시킨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화 투쟁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각계 반응

온 남녘땅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유신> 악당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긴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는 애국의 열정으로 들끓고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겨주었다(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이렇듯 로동신문은 5·18민주화운동 기간보다는 항쟁이 종료된 이후 다양한 논설과 정론의 지도기사를 통해 5·18의 성격과 의미를 해설하는 보도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보도의 결과는 1981년 5월 18일 1주년의 사설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1981년 5월 18일 로동신문은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는 사설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인민봉기의 성격을 강조했다.

[사설]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광주인민들의 영웅적 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북과남, 해외의 모든 조선인민들은 반파쇼 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항전에 떨쳐나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용감히 싸운 광주항쟁자들의 불굴의 기개를 숭고한 마음으로 돌이켜본다...광주인민봉기는 파쇼의 전횡과 억압에 항거하는 인민대중의 분노의 폭발이었다...광주의 봉기군중은 적이 폭압무력으로 시를 겁없이 포위하고 군사적 위협 공갈, 경제적 봉쇄, 회유 기만 책동을 강행하는 가운데서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이나 봉기도시 광주시를 지켜 용감히 희생적으

로 싸웠다...실로 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사를 빛나는 위훈으로 장식한 특출한 사변이었다. 광주인민봉기가 자주와 독립,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에서 가지는 의의는 거대하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규모로 보나 완강성, 지구성으로 보나 동방 근대 력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크고 진정된 대중적 인민봉기였다(1981년 5월 18일, 로동신문 사설).

이처럼 5·18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보다는 항쟁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다양한 의미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미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80년 5월 29일의 사설과 1981년 5월 18일의 1주년 사설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이후 개최되었던 1980년 10월의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도 5·18의 의미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¹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사건으로서의 5·18이 아닌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갔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새롭게 구성되어진 5·18의 의미는 항쟁 기간 동안 보도된 로동신문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이 글은 5·18왜곡·폄훼세력이 주장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의 진위 여부를 1980년도의 남북관계와 북한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논증하고자 했다.

10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북한에서의 5·18에 대한 의미화 과정과 인식은 전미영 (2010) 참조.

먼저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600여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광주침투가 가능한 것이었는지 당시의 남북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봤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5·18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인 무장투쟁으로 격화되고 있었던 1980년 5월 22일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에서는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제8차 고위급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있었다. 1979년 남한정부의 공식 제안과 비공식 실무접촉을 거쳐 1980년 2월 6일 제1차 실무회담이 개최된 이후 한국의 위태로운 정치상황과 북한의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회담은 1980년 8월 20일까지 지속되었다.

당시의 남북회담 상황은 정부의 공식자료인 ‘남북한 대화록’에 기록되어 있다. 1980년 작성된 남북한 대화록에는 남북대화 상황과 함께 당시의 남북관계 및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사태까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80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북한 위협론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의례적인 주장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북한군 침투는 1980년 당시의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가능성도 낮지만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의 발화와 북한 관련 자료에 근거한 북한 개입설의 진위 여부를 파악했다.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북한 개입설의 근거로 제시된 북한 관련 자료와 발화의 대부분이 객관적 검증이 힘들다는 것을 이용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언론 보도는 5·18왜곡·편협세력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선전 선동의 동원기제는 고사하고 ‘광주의 사태’에 대해 일관된 인식을 갖지도 못했으며 실황중계 수준의 보도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1980년 5월 한달 동안의 로동신문 보도로만 한정하면 당시 로

동신문은 5·18민주화운동보다는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를 더 비중있게 보도했다. 더구나 로동신문은 1980년 5월 29일 사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통일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5·18항쟁의 소식을 뒤늦게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로동신문의 일관되지 않은 보도는 무엇보다도 5·18민주화운동이 이제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수준의 새로운 투쟁 형태로 예상을 뛰어넘어 급박하게 전개되었다는 5·18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항쟁이 종료된 이후인 5월 29일자 사설을 분기점으로 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설 작업과 의미 부여를 본격화했다. 5·18에 대한 기억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5·18왜곡·편향 세력이 북한 개입설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북한 언론보도와 탈북자들의 발화는 조작된 것이거나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보도와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항쟁 이후 새롭게 구성된 5·18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왜곡된 기억에 기초하여 1980년 5월 당시의 상황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로서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평가를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개입설은 분단정치에 기반하여 사실의 은폐와 기억의 왜곡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적 담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참고문헌

- 강명도. 1995.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중앙일보사.
 권명은. 1980. “북한신문의 보도성향: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김대령. 2013. 『역사로서의 5·18』. 비봉출판사.
 _____. 2015. 『임을 위한 행진곡』. 비봉출판사.

- 김원태. 2010.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이논총』 제56호: 247~266.
- 김희송. 2013. “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3호: 5~36.
- _____. 2015. “5·18역사왜곡에 대한 고찰: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3호: 5~35.
- 김희송·최정기. 2014. “열흘간의 항쟁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 의미를 분석을 통한 5·18항쟁의 재구성”, 『시민사회와NGO』 제12권 2호: 191~22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정신선양운동본부. 1997. 『12·12, 5·18 실록』.
- 이광재. 1984. “근대신문 이전의 관보 북한 ‘로동신문’”, 『북한』 84년 5월호: 52~59.
- 오승용·한선·유경남. 2012.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 광명기회.
- 지만원. 2010. 『솔로몬 앞에 선 5·18』. 시스템.
- 전미영. 2010. “북한에서의 5·18과 광주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3권 3호: 52~82.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Special Office for Inter-Korean Dialogue of Unification. 1982. 『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21~30, 1979.9~1982.12)』.
- 윌리엄 그라이스틴(황정일 역). 2014. 『알려지지 않은 역사』. RHK코리아.
- 올리비에 루블(홍재성·권오룡 역). 2003.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5·18 관련 자료〉

- 『로동신문』. 1980년 1월 1일~5월 30일, 1981년 5월 18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 제업사령부. 1980. 『계엄상황일지』.
- 군사연구실. 1980. 『첨부#3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 군사연구실. 1980. 『첨부#7 광주사태수습개요』.
- 군사연구실. 1980. 『첨부#10 작전상황실 상황일지(1980. 5.1~5.16)』.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
보안사령부. 1980. 『날조된 악성 유언비어』.
보안사 1처. 1980.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전교사 정보처. 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 일지』.

투 고 2016.11.18

심 사 2016.12.01

확 정 2016.12.28

ABSTRACT

1980 May Gwangju, and The North Korea

- A critical review on the argument of
'North Korea intervention' -

Kim, Hee-Song

(Research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18 Institute)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Rodong Shinmun of North Korea and 1980's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intends to ascertain the truth of the argument of "North Korea intervention"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n May 22nd, 1980, whe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intensifying as armed struggle, the high-level working conference for the preparation of South-North Prime Minister conference was progressing in Panmunjom. The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stating the mutual conference talks at that time contains the actual and concrete status of 1980's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and the armed local attack cases of North Korea. Taking a look at this "South-North Dialogue", however, we can find out that there were no cases of armed attack during the period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During the period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Rodong Shinmun did not report as a consistent position on the 'Gwangju uprising' and, setting aside the minute-to-minute relay, engrossed in just transporting delayed news. Especially, with limitation to the one (1) month of May, 1980, we can see that the report of Rodong Shinmun specifically focused on the demonstration of "Seoul spring Democratization" rather tha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e can confirm in this study that the report of North Korea press and the arson of North Korea defector which were

presented as a ground of the argument of North Korea intervention are an ideological discourse in order to temporizing the truth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Key Words :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5·18 history distortion,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Rodong Shinmun of North Korea.